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0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운영회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0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이 주거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관리 노동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구청장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구청장의 인권 보호 증진 시책에 참여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책무사항을 규정함
- 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비용,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에 대해 규정함
  -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개선사업” 과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관리 노동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관리 노동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근거로써 적절하다 판단됨

-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구청장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한 표창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검토의견

-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 ‘갑질’ 의혹,  
밤마다 점호 돌며 경비원 거수경례 주민들 “왕국 세우고 대통령 행세”  
명절 때 수백 만원 선물잔치도 논란, 잇따른 민원에 구청 감사 진행 방침)  
출처 : 서울경제(2020. 4. 9)

-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러한 관리 노동자의 부당 간섭, 인권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신설 개정함
  -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2021. 8. 10 개정」
  -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2020. 10. 20 신설」
- 이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리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 또는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이 가지는 행정 제재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